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통일을 위한 4강 외교
발제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일 시: 2017년 07월 06일(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제 26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통일을 추진할 때에는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그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점령하였다. 엄연히 말해 독일은 주권국가가 아니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독일과 달리 남북한 간에 통일을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이 무력으로 남북한 통일을 저지하지 않도록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핵심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변 국가의 간섭과 군사개입도 방지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자결권 보장은 통일의 국제적 명분이다. 북한은 주민의 선거와 자유의지로 정부가 수립된 것이 아니므로 자결권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북한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 미국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가 통일 달성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므로 중국의 협조를 바랄 수 없다. 미국이 미·중 관계 파탄을 각오하고 통일을 지지해야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중국의 거부권이 미국 국익에 해를 입힐 경우 미·중 간의 전략적 담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담합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에 반대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사전에 모두 차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위권 행사로 미국이 직접 방문하여 이를 해체할 수 없다. 해체 권한은 오로지 대한민국만 갖는다. 남북관계는 국내법상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관계이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적 권한이 다르므로 특수부대 긴급 작전도 한·미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북한 안정화 작전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

■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중립화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선호하여 미국의 핵우산 포기, 사드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대만으로 확대 가능성을 레드라인(Red Line)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통일 이후 중국내 각 소수민족 중심으로 지역 분리운동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한미동맹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여 중국으로부터 양해 받아야 할 사항들을 비밀각서로 문서화하고 교환해야 한다.

■ 미국의 협조를 위해 일본의 지원과 공조가 중요하다. 일본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 무기가 없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는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변수로 작용하므로 러시아가 도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 실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UN안보리가 개입한다면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UN안보리에 상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막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UN안보리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자세는 결국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 남·북한 관계의 법적 성격

· 국제법: 북한은 개별 주권국가, 국내법: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체

- 국제법과 국내법은 남북한 관계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한다. 국제법은 남북한을 별개의 주권국가로 규정한다. 반면 국내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 자치체(地方自治體, 지자체)로 지정하였다. 1948년 12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1950년 10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UN의 허가를 받아 평양시민 환영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당시 북한은 UN의 점령지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1991년 8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안보리)가 남북한 UN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후 북한은 국제적으로 주권 국가로 인정받았다.
-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상 북한은 최소한의 지자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주권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 내부의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상호간의 큰 위협이 안 되는 수준까지만 대한민국이 묵인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자치 능력을 상실한다면 대한민국이 자치권을 회수하고 행정권을 대신 이행할 수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자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직접 통치할 권리를 갖는다.

■ 통일외교의 목표

: 최소한 주변 국가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북한 주민의 자결권을 보장해야

- 통일을 추진할 때에는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그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점령하였다. 엄연히 말해 독일은 주권국가가 아니었으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독일과 달리 남북한 간에는 통일을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이 무력으로 남북한 통일을 저지하지 않도록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핵심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변 국가의 간섭과 군사개입도 방지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자결권 보장은 통일의 국제적 명분이다. 북한 정부는 주민의 선거와 자유의지로 정부가 수립된 것이 아니므로 자결권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북한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 우리가 원하는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 확보 및 반대 극복

- 남북이 합의할 경우에는 독일과 달리 주변강대국 동의 불요

●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주변국의 간섭과 군사개입 방지

● 통일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 확보 및 핵심이익 수호

● 북한주민의 자결권 및 북한의 민주화 실현

- 1947-50년 유엔총회결의 112(II), 195(III), 293(IV), 376(V)의 본질적 목표: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of Korea”

[그림 1] 대한민국 통일외교의 목표

- 통일은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작용한다. 미국으로부터 흔들림 없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가 통일 달성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므로 중국의 협조를 바랄 수 없다. 미국이 미·중 관계 파탄을 각오하고 통일을 지지해야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중국의 거부권이 미국 국익에 해를 입힐 경우 미·중 간의 전략적 담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담합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에 반대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할 시 한·미 간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사전에 모두 차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위권 행사로 미국이 직접 방문하여 이를 해체할 수 없다. 해체 권한은 오로지 대한민국만 갖는다. 남북관계는 국내법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관계이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적 권한이 다르므로 특수부대 긴급 작전도 한·미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북한 안정화 작전은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

■ 통일한국 출현에 대한 중국 우려 해소 방안

: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해야

- 미국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북한 핵 미사일 및 화학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미군의 북한 지역 불(不)주둔 공약에 입각하여 무기 제거 즉시 철수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은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 차원에서 UN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 핵무기 및 핵 물질 제거에 중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중국 자위권 행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엔벤 핵 시설의 안전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군사조치보다 안전조치가 더 적합한 문제다. 중국이 북한 장기 주둔의 교두보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참여 허용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중립화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를 선호하여 미국의 핵우산 포기, 사드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대만으로 확대가능성을 레드라인(Red Line)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통일 이후 이의 영향을 받아 중국내 각 소수민족 중심으로 지역 분리운동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한미동맹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여 중국으로부터 양해 받아야 할 사항들을 비밀각서로 문서화하고 교환해야 한다.

■ 일본의 협조 유도과 러시아의 방해 역할 방지

: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철저히 다져야

- 한반도 통일에는 미국의 협조 못지않게 일본의 지원과 공조가 중요하다. 일본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 무기가 없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는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변수로 작용하므로 러시아가 도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 실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UN안보리가 개입한다면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행동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UN안보리에 상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UN안보리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변국가의 도움을 받겠다는 자서는 결국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제 262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남북한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무엇인가?

답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북한 난민의 관리이다. 통일 후 대내외 정치·경제·사회체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북한 난민들을 관리해야 한다. 난민 방지 및 체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수십만 명의 중국 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지는 확신할 수 없다. 특정 상황에서 중국이 이해득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우선 미·중 관계가 중국의 안보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 체제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중국에게 군사적·전략적 이득이 되기엔 부족하다. 중국내 여론도 이해득실 계산의 변수로 작용한다.

질문2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

답변 북한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란 것은 이전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 정권의 최고 목표는 최고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정권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하는 북한은 충분히 중국의 협박도 버틸 수 있다. 현재 북한 정권의 병진정책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별히 경제 악화 징후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지속될 수는 없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의식이 차츰 길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 북한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질문3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으로 대한민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어떤가?

답변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 질서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전략적 이익만 바라보며 국제법을 무시하고 영토를 확장하려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조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와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4 북한 ICBM은 정말 레드라인인가?

답변 레드라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레드라인 경고를 내세우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북한 ICBM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북한은 철광석 등을 팔아 만든 수익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수출입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또한 제재만 강화한다면 북한은 오히려 '제재만 견디면 된다.'는 헛된 희망을 갖는다. 미국을 포함한 북한 주변국가가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